

기업 및 시민사회, '기업 전력구매계약(PPA) 도입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' 공동 지지

그린피스 "기업·발전사업자 간 친환경 에너지 거래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기대"
국내외 기업 협의체 "기업의 생존전략으로서 기업 PPA 도입 촉구"

(2019 년 7 월 29 일)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(KEA), 주한미국상공회의소(AMCHAM) 및 에너지전환포럼과 함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.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의원은 오늘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(PPA)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. 발의를 지지하는 단체들은 PPA 를 도입하면 국내 기업들이 탄소제로경제 시대에 걸맞은 경영 전략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.

전기사업법 개정안에는 현행 전기사업법 내 규정된 "전기신사업" 종류에 "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"을 추가했다. 개정 내용을 반영하면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자유통계를 통해 수요자에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. 이는 기업 전력구매계약 제도 도입의 핵심 근거가 된다. 전력구매계약(Power Purchase Agreement, PPA)은 기업을 비롯한 전기 사용자들이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맺어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.

그린피스는 기업 PPA 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전환을 앞당겨 기후 위기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데 주목한다. 이진선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"기후위기가 엄습하면서 전 세계는 에너지 소비체계를 재생에너지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. 그러나 한국은 국제사회의 노력에 비해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다"고 말했다. 이어 이 캠페이너는 "기업 PPA 를 도입해 국내 전력 56% 가량을 소비하는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. 국내 10 대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100%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 온실가스 약 2,700 만 톤을 감축할 수 있다. 이는 자동차 520 만 대를 운행하지 않아야 감축할 수 있는 양이다." 라고 덧붙였다.

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도의적·환경적 책임을 넘어 경영 전략 차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. 탄소제로 경제 시대에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에너지 비용 절감, 신용등급 상승, 투자 유치,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. 그러나 한국 기업은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가 어려워 세계시장에서 경쟁력과 리더십을 잃어가고 있다. 1,160 여 개 기업으로 구성된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기업 PPA 도입을 촉구하고 나선 이유다.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회장사 삼성전자는 해외 거래처의 거듭된 요구에 유럽, 미국, 중국에서 100%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선언했다.

김성환 의원은 "시급한 기후 위기 상황 속에서 글로벌 기업들은 100% 재생에너지 사용에 동참하는 등 혁신적인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. 이러한 움직임에 뒤처지는 우리 기업의 모습을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다"라고 강조하며 "기업 PPA 를 도입하면 기업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가진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신산업을 태동시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"고 말했다.

한편, 그린피스는 산업부를 대상으로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시킬 기업 PPA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요구 해왔다. 이에 산업부는 제 3 차 녹색성장 5 개년계획(2019.05) 및 제 3 차 에너지기본계획(2019.06)에 기업 PPA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.